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7. 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개요	1
II. 평가 결과 총평	2
III. 평가 영역별 분석	5
IV. '17년 추진방향	13
V. 향후 일정	14
붙임1. 기관유형별 등급	15
붙임2. 평가지표 체계	20

I

개요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2002년부터 실시

2. 대상 기관 : 전체 266개 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계	
중앙행정기관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I	II	III	IV		V
I	II	III											
22	14	7	17	24	17	11	12	22	32	21	27	40	266

※ (유형분류 기준) **중앙행정기관** : 중앙 I-부·처·위원회, 중앙II-청, 중앙III-200명 이하 기관
기초자치단체 : 인구 50만 기준, **국공립대학** : 신입생 3천명 기준, **공공의료** : 국공립대학 병원, 국립병원
공공기관 : 공공 I-임직원 3천이상, 공공II-1천이상, 공공III-500이상, 공공IV-300이상, 공공V-150이상

3. 평가대상 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10월

4. 평가 중점사항

- 계획(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성과·확산(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확산) 부문 평가(소지표 40개)
-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과제 추진, 정부 3.0 등 국정과제 추진 여부를 고려하되, 구체적 이행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5. 평가방법

- 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설문평가자료('16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 평가는 권익위 각 과제관리부서 및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실시
- 평가과정 시스템화를 통한 평가 대상기관의 부담 완화, 현지 점검을 통한 기관별 추진 실적 세부 확인 실시

II

평가 결과 총평

□ 기관 유형별 우수기관 및 향상 기관

○ (우수기관) 실적이 탁월했던 유형별 1위 기관은 다음과 같음

- 행정기관 : 행정자치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각각 중앙 I·II·III), 부산광역시(광역), 서울특별시 강남구(기초),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청), 경상대학교(국공립대학), 국립암센터(공공의료)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공공 I), 한국중부발전(주)(공공 II), 한국마사회(공공 III), 경기도시공사(공공 IV),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공공 V)

※ 공공기관은 이하에서 '공공'으로 약칭

○ (향상기관) 전년보다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5개로 전체 28.2%, 2등급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4개 수준

< 향상 기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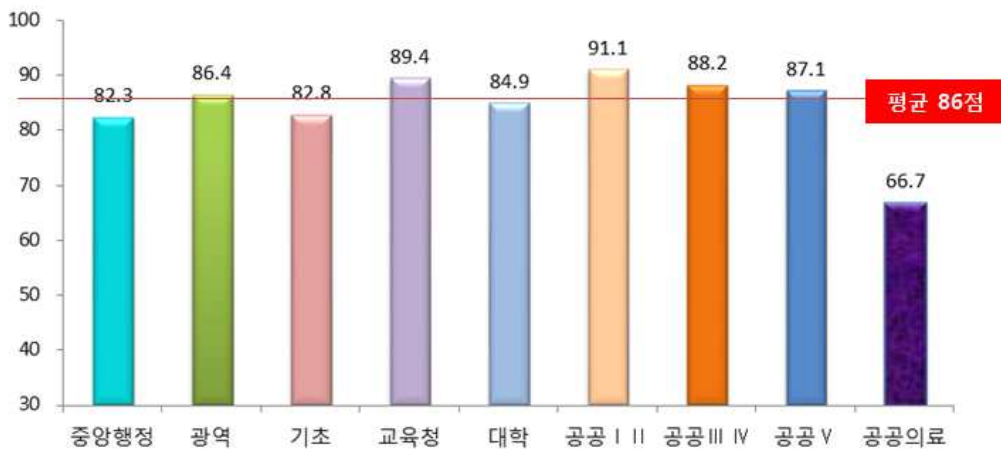
구 분	해당 기관
4등급 향상 (4개)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등급 향상 (4개)	기상청, 법제처, 충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시설공단
2등급 향상 (16개)	외교부, 통일부, 경기도,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화성시,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경대학교, 강원대학교, 대구환경공단, 울산시설공단, 한국소비자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운조합

-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80개로 전체 30% 수준(등급 유지 기관은 111개)

□ 평가 대상기관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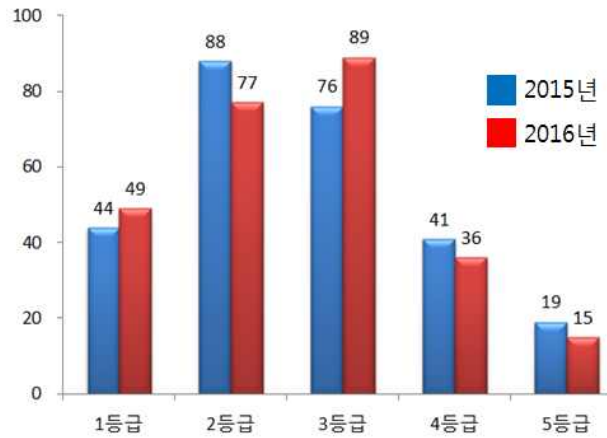
- (평균점수)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6점으로 전년(85.1점)보다 상승, 표준편차는 감소(11.1 → 8.70)하여 기관 간 점수 폭 감소
 - 평가지표 변화로 전년과 단순비교는 힘들으나, 평가 대상기관이 당해 평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기관 유형별 점수)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I·II 유형(91.1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시도교육청(89.4점), 공공III·IV 유형(88.2점) 순
 - '15년부터 시책평가에 포함된 공공의료 부문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적극적 노력으로 전년보다는 상승('15년 : 57.9점 → '16년 : 66.7점)

< 기관 유형별 점수 >



- (등급 분포) 전체 266개 평가 대상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126개로 비율은 47%에 해당('15년은 268개 기관 중 132개 기관, 49% 수준)
 - 2년 연속으로 1·2등급을 받은 기관은 96개로 전체 36% 수준
 - 4·5등급으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51개(19%)로 '15년 대비 9개 감소, 2년 연속으로 4·5등급을 기록한 기관은 21개

< 등급 분포도 >



□ 평가 영역별 결과

-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 청렴 정책의 진행 절차에 상응하여 각급 기관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평가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부문’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뒤는 ‘청렴문화 정착’,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생태계 조성’ 순
 - 공공 I·II 유형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등 4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는 등 공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수

< 평가 영역별 점수 >



※ 표준 편차는 ‘청렴생태계 조성’이 가장 높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 가장 낮음

Ⅲ

평가 영역별 분석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해 업무 특성, 조직 환경, 정책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
 - 단순 과제 나열식, 평가지표 열거식 계획이 아닌 기관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여부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평가

< 평가시 중점 고려 사항 >

- 청렴 추진체계 구축 : 기관장 주도 청렴 관련 고위직 협의체 구축,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청렴 시민감사관 등 거버넌스 운영 등
- 기관별 맞춤형 계획 수립 : 전년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자체 청렴도 등 결과 분석과 정책여건에 기초한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 방향 마련
- 청렴 실행과제 이행계획 수립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자체적발 활성화, 공익신고·부패신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운영, 청렴교육 등 과제별 체계적 계획 수립
- 청렴 노력을 통한 국정과제 이행 : 정부 3.0 이행(업무추진비 등 청렴 관련 사항 공개), 4대 백신 프로젝트(예산누수 방지) 등

- '16년 새롭게 도입된 지표인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6점) 보다 낮은 80.4점 수준
 - 기관 간 편차가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정성평가 지표인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실시(전체평균 80점, 최대 90점, 최소 70점)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I·II 유형(83.5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시도 교육청(80.9점), 중앙행정기관(80.3점), 광역자치단체(80.3점) 순
 - ※ 기초자치단체(78.8점), 국공립대학(79.5점), 공공III·IV(79.6점), 공공V(78.8점), 공공의료(78.3점) 수준으로 타 평가지표 대비 개선 필요

< 우수 사례 >

◆ 기관장 등 고위직, 일반직원, 외부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계획 수립

- ① 경상북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 교육 현장·관계자의 청렴 메아리를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교육감 주관 반부패청렴추진단 운영, 학부모 모니터단 등이 참여하는 시책운영, 운동부 등 취약분야 추진방안을 마련
- ② 우체국금융개발원은 '16년도 청렴활동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고위직 협의체, 윤리경영 협의체, 직원 협의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과 추진 일정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마련
- ③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R&D관련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에 중심을 둔 계획을 수립. 계획 수립과정에서 기관장, 관계부서, 일반직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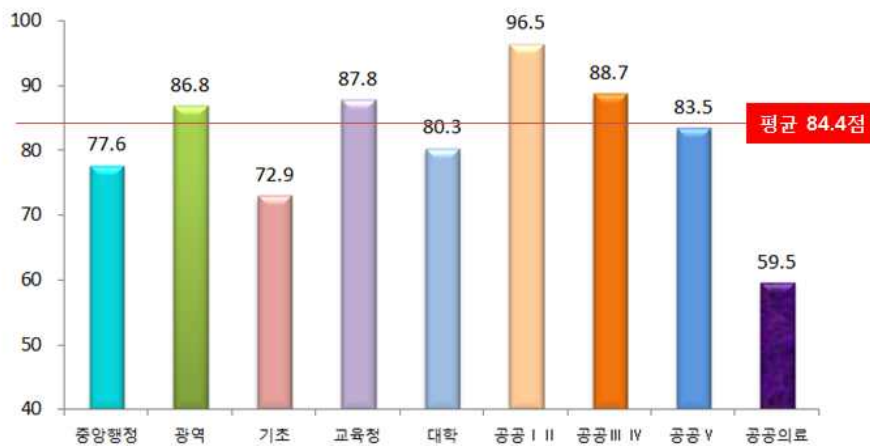
◆ 청렴수준 진단 및 업무 특성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 ① 관세청은 FTA 체결국 확대, 청렴도 측정 결과 등 대·내외적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청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퇴직자 전관예우, 신고물품 검사 축소·수입심사 소홀 등 부작위 비리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반부패 추진방안을 마련
- ②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SWOT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 세부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인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청렴 생태계 조성

- 이 영역에서는 각급기관의 부패방지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청렴정책 참여 확대, 청렴거버넌스 운영 노력을 평가
 - ※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 청렴업무 담당부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청렴업무 추진과정의 구성원 참여 실적,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 9개 소지표
- 청렴 생태계 조성 부문의 평균 점수는 84.4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86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각급기관들은 자신들이 금년 4월까지 수립한 자체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98.0점)
 - 다만, 청렴정책 참여 확대(83.5점)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중점 평가한 청렴거버넌스 운영(81.0점)은 개선 필요

< 기관 유형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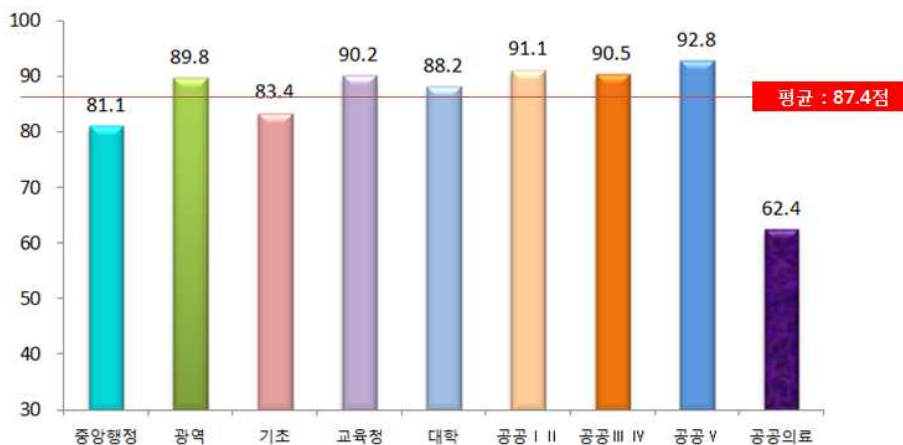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I·II 유형(96.5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공공 III·IV 유형(88.7점), 시도교육청(87.8점), 광역자치단체(86.8점) 순
- '17년 평가에서도 청렴 생태계 조성 부문은 큰 지표 변동없이 적용하여 기관의 지속적 노력 견인 필요

3 부패 위험 제거 개선

- 이 영역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부패 행위 처벌 강화 등의 기관별 노력에 대하여 평가
 -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기관별 부패유발요인 개선,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 운영, 행동강령 실태점검, 자체적발 부패공직자 비율 등 11개 소지표
- 부패 위험 제거 개선 영역의 **평균 점수는 87.4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 (86점)를 다소 웃도는 수준
 - 각급기관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95.8점), 부패행위 처벌 강화 (90.2점) 관련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 다만, 부패취약분야 개선은 전년도 81.8점 대비 하락한 80.2점 수준으로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기관 유형별 결과 >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V 유형(92.8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는 공공 I·II 유형(91.1점), 공공 III·IV 유형(90.5점), 시도교육청(90.2점) 순
- '17년 평가에서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법규화된 사항(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지표 통합(부패행위 처벌 강화) 필요 부분 등 지표 구성 재검토

< 우수 사례 >

◆ 기관별 취약 분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실시

- ① 경찰청은 경찰 수사기능의 공정성, 투명성 증진을 위해 「경찰수사사건 보고 규칙」을 제정하여 보고의 원칙, 보고대상, 보고절차, 보고방법, 수사 보안, 수사지휘 및 지원, 보고교육 등을 명확히 규정
- ②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의 본부·소속기관별 발생 부패 유형을 금품 수수·횡령 및 유용·채용·계약부적정·복무위반 등으로 분류·분석한 후 부패적결 대책회의체 구성, 감사인력풀 확충, 상시감찰팀 구성, 반부패 신고시스템 활성화 등 “반부패·관행적 부패적결 대책”을 적극 추진
- ③ 경기도는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입에 대한 탈세·탈루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국토부·도·각 시군의 개발자료와 지방세입 과세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세입분야 데이터 감사 시스템”을 도입·운영
- ④ 인천광역시 “도매시장 유통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여 출하자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DB 구축, 불법부당 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표준 송품장 및 수탁증 사용, 하역비 부당징수 근절을 위한 표준 하역비 DB 구축 및 정기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시행
- 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협력사 청렴문화 확산 대책”을 마련하여 통신 인프라·철도시설 유지 보수·보안업무 등 협력회사의 서비스 수준 평가 시 청렴활동 실적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
- 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과제 평가자가 과제 기획에도 참여하여 재정 누수와 공정성 훼손을 가져오는 “셀프기획과제 점검 대책”을 시행하여 '16년부터 기획 참여자의 과제 평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업비 규모 과다 산정, 기획 부실로 인한 연구 실적 미흡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노력

4 청렴 문화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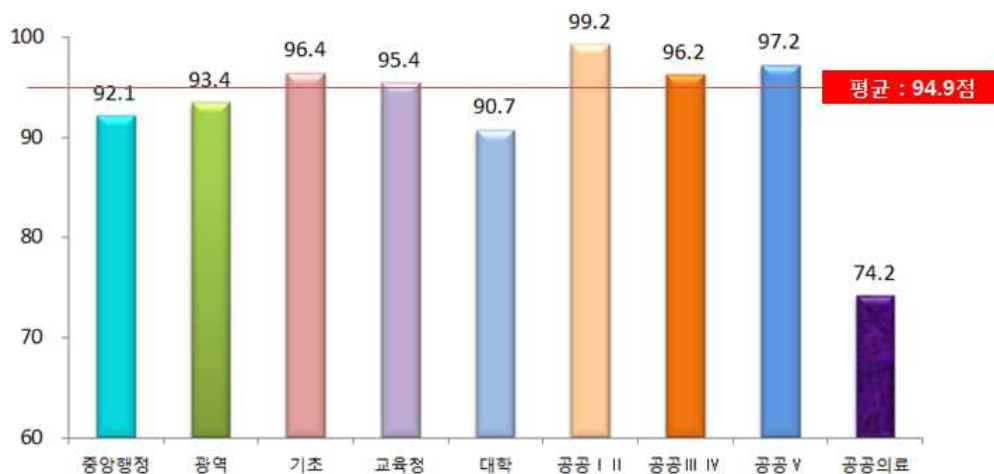
○ 이 영역에서는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활성화에 대한 기관 노력도 평가

※ 청탁금지법 교육,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제도 운영노력 등 14개 소지표

○ 청렴 문화 정착 영역의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94.9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86점)를 지난해(85.1점) 보다 상승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청렴교육 내실화(94.7점)는 각급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6개의 기관이 만점 달성
- 각급기관들은 공익신고 활성화(95.3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94.7점)를 위한 권익위의 요청 사항도 무난하게 실행

< 기관 유형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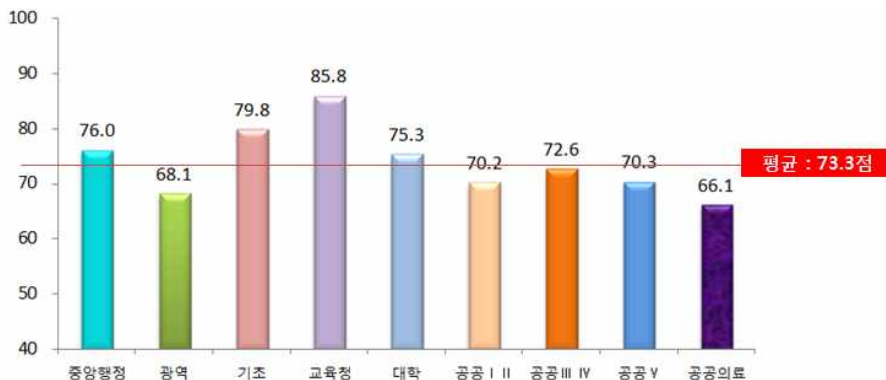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 I·II 유형(99.2점)은 거의 만점을 받은 반면, 공공의료 기관(74.2점)은 더욱 분발이 필요한 시점

○ '17년 평가에서는 법률 의무화 사항(청렴교육 내실화), 지표 통합(공익 신고 활성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 필요 부분 등 지표구성 재검토

5 청렴 개선 효과

- 이 영역은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청렴도 측정 점수,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와 관련한 기관 노력도 평가(소지표 3개)
- 청렴 개선 효과 영역의 평균 점수는 73.3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86점)보다 낮은 수준
 - 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66.6점) 지표가 특히 저조한 상황으로, '17.3월 워크숍 시 기관들의 지표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예정
 - 기관의 전년대비 청렴도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점수는 82.0점 수준으로 청렴도가 향상된 기관과 하락한 기관 수 유사
 - ※ 청렴도 향상시 : 100점, 청렴도 유지시 : 80점, 청렴도 하락시 60점
 - 청렴도에 대한 기관 관심제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87.7점)는 준수한 수준
 - ※ 266개 기관 중 185개 기관(70%)은 국민들이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1회 접근으로 기관의 청렴도 측정 등 점수를 알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공개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5.8점)과 기초자치단체(79.8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공의료(66.1점)가 가장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결과 >



- '17년 평가에서는 법률로 의무화된 청렴도 측정 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실적 지표를 감점부분으로 이동하는 방안 등 검토

< 우수 사례 >

- ① 기상청은 부패방지 시책추진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중점 추진과제의 달성 정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제시, 전년도 실적과의 비교·분석, 내외부 구성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
- ② 서울특별시는 효과성 평가를 위해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과 발생을 감소 비율을 도출하였고, 일반 시민과 내부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차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의 추진 방향을 도출
- ③ 한국중부발전(주)은 효과성 평가를 위해 청렴도 측정, 시책평가,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였고, 정성적 평가를 위해 청렴업무 추진부서, 내부 구성원, 민원인 등의 의견 수렴을 적극 실시

6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 이 영역은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에 대한 기관 노력도 평가(소지표 2개)
-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96.6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86점)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은 250개 기관이,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은 209개 기관이 만점을 받는 등 이행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
- '17년 평가에서는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실적 지표는 유지하되,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지표는 제외 검토
- * 이 지표는 '14년에 도입되어 3년간 운영해 온 지표로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기관자체 행동강령 등에 내용이 반영되는 등 대부분 기관이 도입 완료

IV

'17년 추진방향

○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 대상기관 확대(2~4월)

- 원칙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기관의 기본 틀 유지('16년 266개 기관)
- 기관 청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시책평가의 대상기관으로 신규 추가(기초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시책평가를 활용하여 청렴정책에 대한 관심 제고, 정책 노하우 전수 목적

- 개선 : 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현재 시책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관 중 '16년 청렴도 측정 5등급 기관 및 주요 부패사건 발생 기관
- 운영 : 청렴도 및 시책평가 상위등급 기관과 1:1 매칭 등 기관 간 자율협력 및 담당부서의 지원을 통해 기관 행동강령, 제도 운영 등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개선(2~4월)

- 기본적으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자체 계획수립, 자체 제도개선 지표에 중점
- '16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의 과제관리 부서, 전문가, 관계기관(17.3월 담당자 워크숍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개선

- 신설 : 각급기관의 청탁금지 제도운영 뒷받침
부패·공익신고행위 신고 활성화 등 사항 등
 - 기타 : 청렴교육 의무화 관련 사항
청렴도 측정 결과의 각급기관 홈페이지 공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
- ※ 본 지표에서는 제외하되, 감점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V

향후 추진일정

○ 결과 발표 및 후속조치

- 평가결과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배포 : 1월
-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 2월
- 부패방지 시책평가 공로자 포상 : 2월
-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제출·점검 : 3월
- 평가 대상기관 담당자 반부패교육훈련 실시 : 5월

○ '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운영

- 시책평가 평가지표 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 : 2~3월
- 평가 대상기관 의견수렴 및 담당자 워크숍 : 3월
- 평가지표 확정 및 시책평가 실시계획 수립 : 4월

※ '16년과 동일하게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4월말까지 권익위에 송부
(10장 이내, 기관에서 기 수립한 계획을 지표에 맞게 보완·제출 가능)

- 평가 대상기관별 시책 운영 : 4~10월
- 지표별 기관별 실적 평가 : 11~12월
- 기관별 실적에 대한 현지 점검 : 12월
- '17년 평가결과 발표 : '18.1월

붙임1 기관 유형별 등급

※ 등급 내 순서는 기관 명칭의 가나다순, 밑줄은 유형별 1위 기관

□ 행정기관

구분	중앙 I(22)	중앙 II(14)	중앙 III(7)
1 등급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u>행정자치부</u>	<u>경찰청</u> 관세청 기상청 중소기업청	
2 등급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u>방송통신위원회</u> 법제처 여성가족부
3 등급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인사혁신처	검찰청 국세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4 등급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5 등급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평균점수 : 82.3점 (중앙 I : 부·처·위원회, 중앙 II : 청, 중앙 III : 200명이하 소규모 기관)

구분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4)	시도교육청 (17)	국공립대학 (11)	공공의료 (12)
1 등급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대학교	국립암센터 충남대학교 병원
2 등급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3 등급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경상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4 등급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5 등급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청남도 천안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주대학교	한국원자력 의학원

※ 평균점수 : 광역(86.4점), 기초(82.8점), 교육청(89.4점), 대학(84.9점), 의료(66.7점)

□ 공직유관단체

구분	공공 I (22)	공공 II (32)
1 등급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2 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부산교통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대구도시철도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전KDN(주)
3 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인천교통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4 등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등급		

※ 평균점수 : 91.1점

구분	공공 III(21)	공공 IV(27)
1 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한국마사회</u>	경기도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2 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3 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국방기술품질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부산환경공단 울산시설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력거래소
4 등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등급	한국거래소	

※ 평균점수 : 88.2점

구분	공공 V(40)	
1 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u>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u> 해양환경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등급	(주)강원랜드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등급	광주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전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4 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군인공제회 전남개발공사 한국장학재단
5 등급	대한체육회 한국고용정보원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평균점수 : 87.1점

붙임2

평가지표 체계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A. 계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행	1. 청렴생태계 조성 (0.25)	1-1. 계획의 이행 여부(0.15)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0.4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0.4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는 1-1 (0.40), 1-2 (0.60)	9
	2. 부패위험 제거 개선 (0.25)	2-1. 부패취약분야 개선(0.45)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0.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0.25)	11
	3. 청렴문화 정착 (0.15)	3-1. 청렴교육 내실화(0.40) 3-2. 공익신고 활성화(0.30) 3-3.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활성화(0.30)	14
C. 성과·확산	1. 청렴개선 효과 (0.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0.60) 1-2. 청렴도 측정 점수(0.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0.10)	3
	2.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0.10)	2-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0.20) 2-2.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0.80)	2

※ 감점사항 : 부패사건 외부적발(최대 5점),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최대 5점)